

법원 '제3자 변제안 거부' 양금덕 할머니 배상 공탁 불수리 결정

日 강제노역 피해자 대상 정부 절차 '제동'

법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금덕(94) 할머니(사진)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사진)의 법률 대리인이 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공탁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 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 규정 등을 두루 고려해 공탁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은 일본재찰(옛 신일찰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102)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전주지법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반려했다.

정부가 유족이 아닌 박 할머니에게 공탁을 신청했고 공탁관은 "방언(박 할머니)이 피공탁자가 될 수

이춘식 할아버지,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서류 미흡 반려'

외교부 이의 제기에도 불수리 결정하면 법관이 적법 심리

소송지원단체 "변제안 수용 거부 명백, 공탁 절차 철회"

없다. 상속인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반려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



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양금덕 할머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즉시 이의 절차에 속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의 제기에도 공탁관이 또 불수리하면, 신청 사건 전담 법관이 적법 여부(공탁이 변제로서 유

효한지 등)를 심리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

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법 469조에 따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금덕·이춘식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다른 유족 2명은 이미 지

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제3자 변제인을 결코 수용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공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은 피해자들이 가해자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인 이해 관계가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은 더욱이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적 없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면서 "재단의 판결금 공탁은 그 자체로 미쓰비시중공업 등 기해 전범기업인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율러 "공탁 절차 개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3자 변제 반대 피해자 지원 모금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타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쌓아 왔던 것은 단순히 우리 정부로부터 돈 몇 푼을 받자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무고한 조선인·어린 소녀들의 인권을 침해한 전범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자는 것이다"면서 정부에 공탁 절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뉴스



리파엘 그로시(왼쪽)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IAEA는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日 오염수 방류 계획 안전 기준에 부합"

IAEA, 기시다 총리에 보고서 전달·공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쳐리수) 해양 방류 전 미지막으로 관련 계획을 평가한 '포괄 보고서'에는, 일본 대처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일본 공영 NHK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AEA가 이날 공표한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을 방문한 리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만나 해당 보고서를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포괄 보고서를 전달

받고 "우리나라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름쯤'이라고 밝힌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 시기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IAEA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왔다. 지금까지 6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번 포괄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전 마지막 보고서다. /뉴스

"외국인 농업노동자 안정 공급, 제도 기반 마련을"

박정규 도의원, 지역농업연구원 주최 세미나서

"장기적 측면 접근해야… 공적 영역 일부 담당 등 필요"



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 접근방식의 시유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들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미 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농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또한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훈련과 반복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단기간의 취업구조를 통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일 수가 없어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동여건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정규 의원은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완주군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언론인 간담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현장의 정 활동

화산체육관 찾아 시니어배드민턴 대회 준비상황 살펴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 의원)가 4일 전주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설 개선공사 중인 화산체육관을 찾아 각종 준비 상황을 살폈다.

제9대

완주군의회는 10여년간 사용한 캐치플레이를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로 변경하고 군민과의 소통으로 최우선을 과제로 선정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5분자유질언 43회, 건의안 11건 결의안 5건, 군정질문 2건, 의원별의 조례안은 64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는 최고등급의 대회로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세계 30여 개국 3천여 명의 시니어 배드민턴들이 참여한다.

송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많은 배드민턴들이 전주를 찾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스포츠와 관광의 연계 등으로 더욱 발전하는 전주 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